

박선호 차관, ‘일하고 싶은 건설현장’ 조성 당부 **17일 발주기관 간담회 통해 국토부 산하·소속기관의 추진현황·계획 점검**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17일(화) 세종에서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(참석)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, 5개 지방관리청, LH, 도로공사, 철도시설공단, 철도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수자원공사

-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(17.12)」, 「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(19.11)」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,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중으로,
- 이번 간담회는 건설 일자리 주요 대책을 일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토부 소속·산하기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임금직접지급제, 전자카드제,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등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다양한 시도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.

- 철도시설공단의 경우,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지급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 성공사례를 타 공공기관에 확산해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도입된 LH의 근로자 DB 시스템, 도로공사의 이동형 전자카드 등의 모범사례도 공유되었다.

* 실시간 근무자수, 외국인 노동자 체류현황 등 종합관리시스템 도입(LH)
오지·선형 건설현장에서도 이용 가능한 이동형 인식장치 도입(도로공사)

□ 박선호 차관은 “국토부는 내년에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보장과
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, 정책의
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모범사례들이 타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
노력해 달라”고 주문했다.

○ 또한, 내년에도 국토부 소속·산하의 건설현장이 근로자들 사이에서
‘일하고 싶은 현장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.

2019. 12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